

# KTX 광주역 진입 타당성 공방

시의회 임시회서 강운태 시장-시의원간 고성  
각화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축소 추진도 논란

9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194회 임시회에서는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역 진입 타당성 여부와 광주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의 축소 추진 문제가 논란이 됐다.

특히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역 진입 타당성을 놓고 시장과 시의원이 고성을 주고 받으며 공방이 벌어졌다.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역 진입 공방=광주역이 지역구에 속해 있는 진선기 의원(민주·북구 1)은 이날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광주시가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역 진입방안에 대해 무사안일과 책임회피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광주시를 질타했다. 진 의원은 “KTX 광주역 운행 여부는 광주시의 미래 교통정책의 핵심 문제일 뿐 아니라 도심 공동화와 구간 균

형발전 문제도 결부되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광주시가 국토부와 협의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KTX 광주역 미 진입 방침을 수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북구청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KTX 광주역 진입을 광주시에 건의했지만, 대책 마련은커녕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며 공청회 개최와 국토부와 협의의 요구 등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강운태 광주시장은 “(정부의 KTX 광주역 미 진입 방침을 수용할 당시) 시장이 아니어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한 뒤 “당시 광주시가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전동차를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조건으로 KTX 광주역 미

진입 방침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현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광주 송정역과 광주역을 전동차로 연결하거나, 30분이 더 소요되더라도 정을 역에서 광주역까지 철도로 연결하는 방안이 있다”라며 “주민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답변에서 KTX 광주역 진입 논란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도 이제 와서 거론하는 것은 당시 활동했던 시의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시장 답변 이후 진 의원은 강 시장을 출석시킨 채 질문일답에 나섰으며 그 과정에서 “시장이 보고를 잘못 받은 것 아니냐”, “그럼 공청회를 합시다” “앞으로 잘하세요” 등의 고성이 오기도 했다.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축소 논란=문상필 의원(민주·북구 3)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은 지난 2008년 6

월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23억원, 시비 123억원, 국가응원 165억원 등 총 사업비 411억원을 들여 오는 2012년 말 준공키로 했던 사업이었지만, 광주시가 지난해 9월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보류하고 12월 농립수산식품부에 3분의 1 규모인 총 사업비 154억원 규모로 축소 승인 신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민선 5기 광주시장이 바뀌면서 각화농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이 축소된 것이며 이는 광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광주시의회와 협의는 물론, 시장상인들의 양해를 구한 적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시 재정상황과 영업손실을 막으려는 유통종사자들의 의견을 고려해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며 “해당 사업이 축소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안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권길기자 cki@kwangju.co.kr



## “무바라크 즉각 사퇴하라”

반정부 시위 15일째인 8일(현지시각)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에 시위사태 이후 최대 인파로 축산되는 수십만명이 몰려 호스니

/연합뉴스

# 이집트 시위대 최대 인파…노동자 파업 변수

## 석방 구글 임원 구심점…수에즈 운하 운영 차질 관심

3주째로 접어든 이집트 반정부 시위가 시위를 주도했던 구글 임원의 석방을 계기로 전기(轉機)를 맞고 있다. 이집트 정부가 개헌 및 정치 개혁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당근’을 내놓으면서 반정부 시위가 기로에 서는 듯했지만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되는 등 새로운 돌발 변수가 등장하고 있다.

반정부 시위 15일째인 8일(현지시각)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 등 이집트 전역에는 수십만 명의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이집트 황구도시 알렉산드리아 등에도 기록적인 인파가 등장, 시위를 이어갔다. 현지 언론들은 이날 운집한 인파가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라고 추산했다.

이집트 시위대의 성지 타흐리르 광장은 이번 시위의 구심점 역할을 한 구글 중동·북아프리카 마케팅 담당 임원 와엘 그호님(31)의 석방을 계기로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있다.

황구 도시인 수에즈에서도 200여 명의 통신 노동자와 1300여명의 철강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수에즈 운하를 운영하는 기업 소속의 노동자 3000여명도 수에즈와 이스마일리아 등에서 급여 인상과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을 시작했다. 수에즈 운하의 지중해 쪽 항구인 사이드 항의 노동자들도 9일부터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수에즈 운하 운영 당국은 파업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운영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8%를 점유하는 수에즈 운하의 운영 차질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

## 석방 구글 임원 구심점…수에즈 운하 운영 차질 관심

### 국과수 “해군 유탄” 확인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의 몸에 서 나온 탄환 3발 가운데 1발은 우리 해군이 쏜 총알이 벽면 등에 부딪힌 뒤 박힌 유탄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식 결과, 탄환 3발 가운데 1발이 우리 청해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9x19mm Luger탄’과 동일한 종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탄환의 변형 형태로 미뤄 벽면이나 바닥 같은 곳에 1차 충격에서 생성된 유탄이 석 선장의 몸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이주여성-고국부모 화상상봉 가능

행안부, 전국 380개 정보화마을서 추진

전국 380여개 정보화마을에서 결혼 이주여성들과 농촌주민들을 위한 화상상봉이 언제나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충북 진천군 백곡면 명암리 명심체험정보화마을에서 전국 시·도 관계자 30여명과 한국 지역정보개발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동워크숍을 열고, 올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와 화상상봉 상시 운영 등 시책 방향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이 자리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고국의 부모 친지들과 원하는 시간에 화상상봉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화상상봉 이용환경을 어떻게 조성하고 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일반 농촌주민들도 도시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자녀 및 친지들과 화상을 통해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 이날 현장에서는 화상상봉을 위한 모니터 등 장비를 설치, 전시하고 시연행사도 가졌다.

/연합뉴스

# “담양 대나무숲, 영산강 사업으로 크게 훼손”

## 박철홍 도의원 주장

전국적인 유명 탐방지로 각광받고 있는 담양의 대나무숲이 영산강사업으로 크게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철홍 전남도의원은 9일 열린 제257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영산강 사업 도중 우리나라 내륙습지 1호이자 탑사르 협약으로 습지 환경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담양습지 일부 구간의 생태계가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담양습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흥수조절이 가능했을텐데 정

독, 광장을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대전면 인근 습지 대나무 숲 10만여㎡ 가운데 약 2만5000㎡가 절개됐고 이로인해 1만그루에 달하는 대나무가 무차별 벌목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훼손이 심각한데 앞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다며 53곳에 달하는 습지 곳곳을 파헤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무차별 벌목과 굴착기가 판치는 환경보존구역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담양습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흥수조절이 가능했을텐데 정

부가 4대강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해 전국적인 명물인 대나무숲을 파괴했다”면서 전남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와관련, 대나무숲이 하천부지 인쪽으로 들어오면서 하천 흐름을 막는 바람에 인근 농경지가 자주 침수돼 주민들의 민원도 이따라 잘라낼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사업행위 허가까지 받아 적법하게 시행했다”며 “훼손된 부분 바로 옆쪽에 5만여㎡ 규모로 대나무숲을 새로 조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지일기자 dok2000@kwangju.co.kr

생방이 협의해 확정해 나갈 것을 제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제 적십자회담 개최 여부는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에 남북관계 상황 등을 보면서 추가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9일 관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린 이를째 대령급 남북 군사실무(예비)회담이 고위급 군사 회담 개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결렬됐다.

/연합뉴스

# 정부 “남북 적십자회담 원칙적 동의”

## 대화국면 전환 채비

정부는 9일 북측이 제의한 남북 적십자회담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의 대북 전통문을 발송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10시20분께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북한 조선 적십자회담 앞으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전통문을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보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구체적인 일자와 장소는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이후에